

1.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지방재정분권 방법론에 관한 논의

지방재정의 총규모가 2007년 111.9조원에 달하고,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총재정사용액 기준으로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 42.3% 대 57.7%로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79.5% 대 20.5%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8:2의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세입기반에 있어 국세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소득·소비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는 농축수산업 위주의 재산세 중심이어서, FTA가 발효될 경우 지방은 농업분야 개방으로 농어촌 정주기반이 위축되어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가는 금융시장의 확대와 자동차·IT분야 등의 수출확대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산업 vs. 내수산업, 성장산업 vs. 전통산업 등의 입지 차이로 인한 지역간 성장의 격차확대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인구수 감소에 따른 선거구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통합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FTA로 인해 재정측면에 있어 국가/지방간 수직적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수평적 형평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정분권화 방식에 있어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주의와 이전재원 중심의 일반재원주의가 각각 일정부분 논리적 근거를 갖고 여전히 논쟁의 중심축을 형성하리라 판단된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개인간 소득격차 심화를 기본으로 산업간 양극화와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더 악화시킬지, 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처방이 될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FTA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처방이 된다는 견해도 그 전제조건으로 비성장산업에서 방출되는 자원을 성장산업에 흡수·활용하기 위한 재교육, 소득계층간 교육격차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현재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2) 지방재정관리 분야

① 지방조달/계약/투·융자사업 분야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자치단체 조달의 개방범위는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97)